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1019-10000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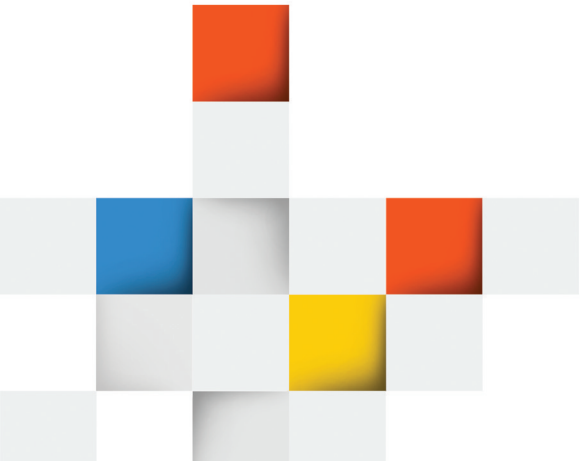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5

https://mods.go.kr/sri

20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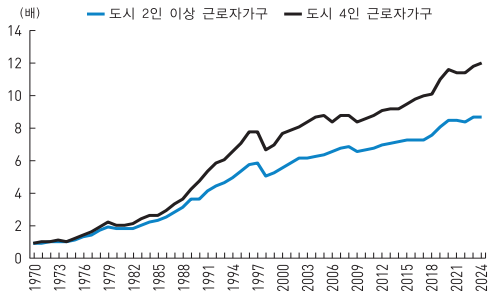
해방 후 ~ 1960년대	1970년대 ~ 외환위기 전	외환위기 이후 ~ 2000년대	2010년대 ~ 현재
절대적 빈곤기 (전후 피폐와 원조경제 의존)	소득·지출 급등기 (낙수효과)	분배 악화기 (빈곤·불평등 증가)	재분배 확대기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간 분기)

[시대별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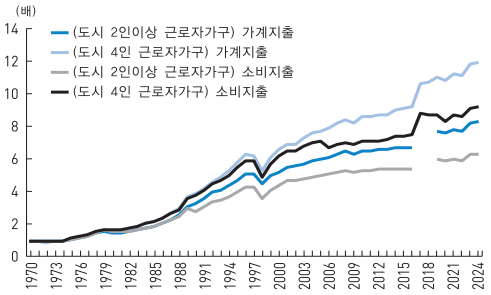
- **(해방 후~1960년대)** 한국전쟁 후 피폐한 산업과 경제 상황하에서 다수 서민의 삶은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다. 명목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53년에 67달러였고, 1960년에도 80달러에 불과했다.
- **(1970~외환위기 전)** 국가 주도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과 지출이 급등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서민의 살림살이가 크게 좋아져 소비주의 문화가 꽃을 피웠다.
- **(외환위기 이후~2000년대)** 1997년 외환위기의 발발로 빈곤과 불평등 수준이 크게 상승하였고, 위기 극복 이후 2010년 전후까지도 분배 상황은 악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복지지출도 급성장하면서 가구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 **(2010년대~현재)** 국가 복지의 성장으로 2010년 이후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증가하면서 시장소득 분배 악화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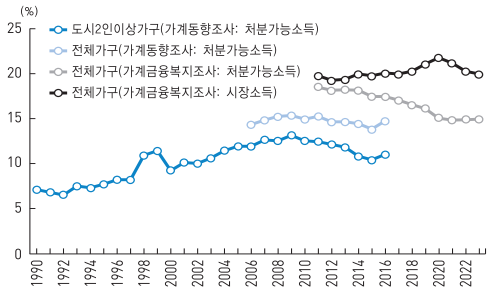
가구 실질소득 성장 배율(1970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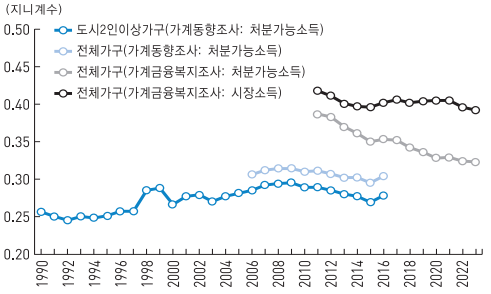
가구 실질지출 성장 배율(1970년=1.0)



빈곤율



불평등도(지니계수)



주: 출처, 정의 등은 본문을 참고하기 바람.

'80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국 현대사는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압축적인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전근대, 근대, 후기근대를 하나의 공간에 담고 있는 지난했던 시기 동안 한국인의 소득과 지출, 나아가 생활 수준은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

'초근목피(草根木皮)'로 표현되던 전후 피폐한 서민의 삶은 이촌향도와 노동자화를 거쳐 1970~1980년대 가구 소득과 지출의 급등기를 맞았다. 이 시기, 특히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 중반까지는 소위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펴지고 소비주의 문화가 확산된 시기였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는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1997년 말 발발한 IMF 외환위기는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환란'[1]이었다. 실직, 파산으로 인해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지만, 이를 방지할 국가 차원의 안전장치는 거의 없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방기되었던 안전망(safety-net)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는 신자유주의 시장과 국가 복지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동시에 확대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까지는 시장 불안정성이 더 빠르게 확산되면서 빈곤과 불평등이 추세적으로 증가한 데 비해, 2010년을 전후해서는 국가 복지 확대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완하면서 재분배 효과가 커진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해방 이후, 특히 1970년 이후 소득, 지출, 분배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국민소득 통계와 가계 통계를 함께 제시하여 1970년대 전후부터 최근까지 가구 생활 수준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2] 본문에서는 명목소득(지출)과 실질소득(지출)을 혼용하여 제시하였다. 명목소득(지출)은 당해 연도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며, 실질소득(지출)은 명목소득을 기준 연도의 물가지수로 나누어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값이다.[3]

소득

한국전쟁 이후 피폐한 산업과 낙후된 경제적 여건 속에서 다수 국민이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와 경

1) 실제로 '외환위기'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면 당시 언론 등에서 외환위기를 종종 '외환위기 환란', '1997 환란', 'IMF 환란'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거시 자료인 국민소득 통계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가계 생활 수준을 볼 수 있지만 가구 특성에 따른 생활실태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가계 통계는 소득과 소비 등 경제적 자원에 대한 미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분포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국가데이터처, 2015).

3) 따라서 명목소득이 상승했더라도 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질소득 상승률은 마이너스가 되어 경제 형편이 나빠진 것이 된다. 명목소득은 당해 연도의 시장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직관적이고 파악하기 용이하다면, 실질소득은 구매력을 동등화하여 실제 생활 수준의 증감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시계열 비교 시에는 기준 연도 물가지수로 나누어 주어야 하고, 국제 비교 시에는 국가 간 구매력을 동등화하는 구매력지수를 산출해야 하므로 정확한 계산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제개발에 힘입어 국민소득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53년 67달러에 불과하던 명목 1인당 국민소득은 1977년에 1천 달러를 넘어섰고, 1994년, 2005년, 2014년에 각각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를 넘어섰다(표 Ⅵ-1).[4] 1994년 이래로 약 10년마다 1만 달러씩 명목 1인당 소득이 상승한 것이다. 2024년 명목 1인당 소득은 1953년에 비해 548배 높은 36,745달러에 이른다.

〈표 Ⅵ-1〉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 1953-2024

연도	1인당 국민총소득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	
	(만 원)	(달러)	(만 원)	(달러)
1953	0.2	67	-	-
1960	1.0	80	-	-
1970	8.9	260	-	-
1975	30	622	23	482
1977	52	1,070	39	811
1978	69	1,488	53	1,126
1980	105	1,729	76	1,244
1990	482	6,804	323	4,557
1994	860	10,706	583	7,260
2000	1,428	12,632	876	7,744
2004	1,958	17,103	1,150	10,049
2005	2,051	20,026	1,201	11,725
2010	2,788	24,110	1,545	13,364
2014	3,244	30,798	1,826	17,338
2020	4,004	33,929	2,280	19,322
2021	4,337	37,898	2,364	20,660
2022	4,551	35,229	2,495	19,308
2023	4,725	36,195	2,632	20,165
2024	5,012	36,745	2,774	20,339

주: 1) 명목소득임.
2) 국민총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총소득을 말함.
3)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함.
4) 2024년은 잠정치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1인당 국민총소득이 단순히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값이라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 부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값이라는 점에서 가구의 생활 수준 변화를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명목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1978년에 1,000달러를 넘어선 이후, 2004년, 2021년에 각각 1만 달러와 2만 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1975년 이래 70%대이던 둘 간의 비율은 1983년부터 60%대로 줄어들었으며, 2002년 이후 최근까지는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2020년 전후로 2만 달러 언저리를 맴돌며 다소 정체된 상태에 놓여 있다.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5]를 고려한 한국의 실질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 3,295달러에서 2023년 39,812달러로 이 기간에 12.1배 증가했다(표 Ⅵ-2). 이는 동일 기간에 미국, 독일, 스웨덴의 실질 1인당 국민소득이 각각 2.5배, 2.3배, 1.9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그 결과, 1970년에 독일의 15.2%에 불과하던 한국의 실질 1인당 국민 소

4) 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8,492달러)과 세계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19,916달러)에 일시적으로 각각 1만 달러와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5) 구매력 평가(PPP)는 국가 간 생활비나 구매력을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로, 특정 재화와 서비스로 상품바구니(마켓바스켓)를 구성하여 각 나라에서 이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표준화한 값이다.

〈표 Ⅵ-2〉 주요 OECD 국가의 실질 1인당 순국민소득, 1970-2023

(달러)

연도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1970	3,295	21,700			26,366		24,085
1980	6,089	27,309			29,256		27,709
1990	14,371	34,674			34,325	28,561	34,993
2000	22,648	40,227	41,075	31,351	39,823	37,165	45,030
2010	31,734	45,255	38,582	31,500	46,361	40,193	47,778
2020	38,429	48,831	36,143	33,440	49,356	39,381	53,744
2023	39,812	49,862	41,207	35,588	50,443	44,900	59,230

주: 1) 순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에서 고정자본 소비(감가상각)를 차감하여 계산한 값임.
2) 연도별 · 국가별 비교를 위하여 2000년 기준 구매력평가(PPP)로 표준화한 값임.
3) 한국과 독일의 2023년 수치는 잠정치임.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2025.08.

득은 2023년에 79.8%까지 추격했으며, 2010년 전후로는 일본의 실질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했다.

가장 긴 시계열의 가구 서베이조사라 할 수 있는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가구소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명목 가구소득은 1970년에 2.8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 95만 원, 2010년 401만 원, 2024년 721만 원으로 증가했다(표 Ⅵ-3, 그림 Ⅵ-1).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총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은 1970년에서 2024년까지 기간에 각각 10.4배, 8.7배 증가했다. 가구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6] 4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동일 기간에 실질 총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은 각각 14.4배, 12.0배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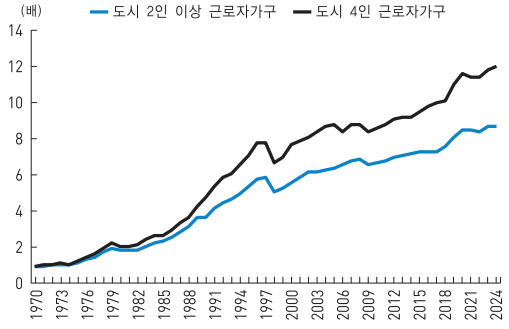
6) 1970년에서 2024년 사이에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5.3명에서 3.0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가구 1인당 소득과 소비는 제시된 것보다 더 크다. 이러한 가구원 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4인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함께 제시했다.

〈표 Ⅵ-3〉 가구소득, 1970-2024

연도	가구원수	명목소득		실질소득	
		(총) 소득	처분 가능소득	(총) 소득	처분 가능소득
	(명)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도시 2인 이상 근로자가구					
1970	5.3	2.8	2.6	61	56
1980	4.5	23	22	112	107
1990	4.0	95	79	246	206
2000	3.6	239	198	378	313
2010	3.4	401	323	464	374
2020	3.1	603	480	603	480
2024	3.0	721	562	631	492
도시 4인 근로자가구					
1970	4.0	2.4	2.2	52	48
1980	4.0	22	21	107	103
1990	4.0	96	88	249	229
2000	4.0	262	233	415	369
2010	4.0	445	359	515	416
2020	4.0	709	557	709	557
2024	4.0	858	662	751	580

주: 1) 2020년과 2024년 연간 소득은 당해 연도 4개 분기소득의 산술 평균값임.
2) 실질소득=(명목소득/(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지수)×기준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각 연도.

[그림 Ⅵ-1] 가구 실질 처분가능소득의 성장 배율, 1970-2024 (1970년=1.0)



주: 1) 2017년부터 2024년 연간 소득은 당해 연도 4개 분기 소득의 산술 평균값임.
2) 실질소득=(명목소득/(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지수)×기준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각 연도.

가해서, 전체 근로자 가구에 비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림 Ⅵ-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래 1980년대 중반부터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소득 성장 배율은 가장 가파른 기울기를 보여 이 기간에 가구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도 소득 증가세는 지속되었지만, 이전에 비해 기울기는 확연히 낮아졌다. 이는 인구 고령화 등의 요인들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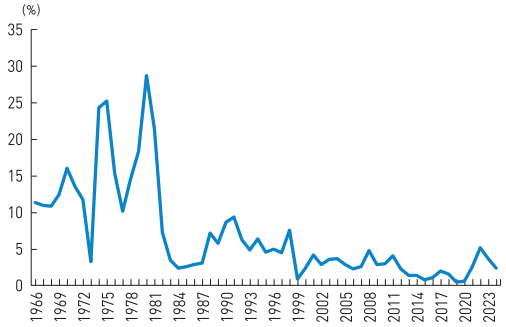
물가와 지출

소비자물가지수

산업화 이후 가구소득의 급속한 상승이 가구 소비지출 증가를 견인하면서 전체적인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소득 변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이전에는 명목소득 증가에 비해 실질소득 상승률이 그리 높지 않았는데, 이는 이 시기에 높은 물가 상승률에 기인하는 것이다.[8] 즉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에는 소득 증가만큼이나 물가 안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았을 뿐 아니라 등락 폭도 컸으나, 1980년대 이후 점차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Ⅵ-2). 1966년부터 1981년까지 16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15.5%에 이르렀고, 1973년 3.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이 기간 내내 10% 이상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9] 하지만 1982년 이후 최근까지는 단 한 번도 물가상승률이 10%를 넘은 적이 없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코로나19의 기저효과 등으로 2022년 물가상승률이 5.1%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5% 미만의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Ⅵ-2] 소비자물가 등락률, 1966-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총량적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교육비와 식료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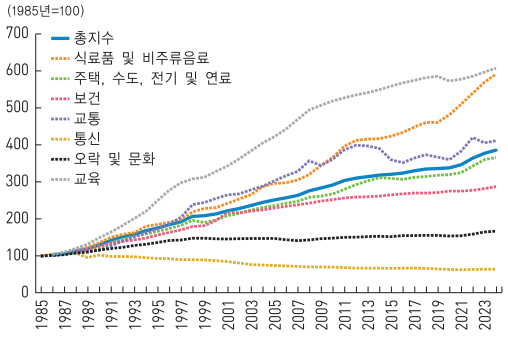
7) 1970년에서 2024년 사이에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5.3명에서 3.0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가구 1인당 소득과 소비는 제시된 것보다 더 크다. 이러한 가구원 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4인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함께 제시했다.

8) 예를 들면, 어떤 기간 동안 명목소득이 2배 증가했더라도 물가상승률 역시 200% 상승했다면 실질소득 상승률은 0%이다.

9) 한국은행은 해방 이후 1965년까지를 물가 폭등기, 1966년에서 1985년까지를 고물가기, 1986년 이후를 물가 안정기로 구분하고 있다(한국은행, 2005).

의 물가상승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그림 Ⅵ-3] 참조). 1985년 물가지수를 100.0으로 볼 때, 총소비자물가지수는 2024년에 386.3인 데 비해, 교육비와 식료품비는 607.6과 591.9이다. 반면, 정보기술 혁신의 영향을 크게 받은 통신비의 물가지수는 2024년에 64.5로 1985년에 비해 오히려 단가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초에는 휴대용 전화기가 '부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보편적 생활필수품이 될 정도로 희소성이 떨어졌고 그만큼 상대 가치도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Ⅵ-3] 주요 비목의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1985-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표 Ⅵ-4〉는 1975년에서 2024년까지 기간에 주요 식료품 품목의 가격 변동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제시된 품목 중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한 품목은 자장면으로, 1975년에 141원 하던 자장면 가격은 2024년 6,157원으로 이 기간에 43.7배 인상했다. 반면, 쌀 가격은 동일 기간에 한 가마 기준으로 18,367원에서 168,535원으로 9.2배 오르는 데 그쳤다. 이외에도, 이 기간에 한우는 37.9배, 돼지고기는 14.4배, 소주는 13.5배, 달걀은 10.3배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4〉 주요 식료품 품목 가격 변동[1] 1975-2024

(원)

품목	1975	1985	1995	2005	2015	2024
쌀[2] (80kg)	18,367	50,456	88,391	124,626	142,637	168,535
달걀 (1개)	27	56	85	143	201	278
국산쇠고기 (500g)	798	3,998	8,414	17,306	22,801	30,282
돼지고기 (500g)	545	1,832	2,181	4,136	5,948	7,859
자장면	141	627	1,903	2,975	4,176	6,157
소주	123	334	615	1,063	1,273	1,664

주: 1) 1975년 서울지역 식료품 가격을 기준으로 2020년 기준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추정한 각 연도의 식료품 값임.
2) 쌀은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출처: 한국은행, 「통계로 보는 광복 60년사」, 2005;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지출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1인당 소비 수준은 소득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표 Ⅵ-5, 그림 Ⅵ-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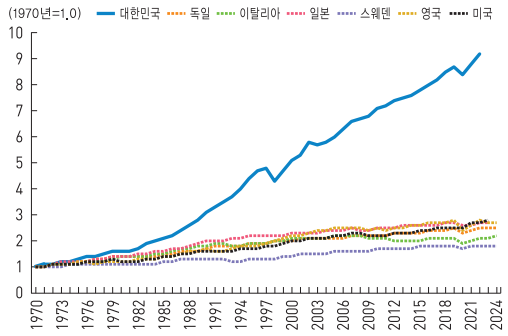
〈표 Ⅵ-5〉 주요 OECD 국가의 실질 1인당 소비, 1970-2022 (2020년 구매력 기준)

(달러)

연도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1970	3,065	16,302	15,314	10,996	19,885	13,715	18,938
1980	4,848	22,812	21,525	15,446	22,588	17,048	23,374
1990	9,514	27,326	27,769	21,597	25,965	22,677	29,886
2000	15,577	33,306	32,249	24,801	28,758	29,735	37,716
2010	21,649	36,198	32,541	27,318	33,024	33,717	42,211
2020	25,827	38,673	29,429	28,447	34,227	33,096	46,996
2022	28,116	41,386	32,686	29,695	36,018	37,754	51,839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2025.08.

[그림 Ⅵ-4] 주요 OECD 국가의 실질 1인당 소비 성장 배율, 1970-2024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2025.08.

2020년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2022년 실질 1인당 소비는 28,116달러로 1970년(3,065달러)에 비해 9.2배 증가했다. 이는 동일 기간에 영국(2.8배), 미국(2.7배), 일본(2.7배), 독일(2.5배), 이탈리아(2.1배), 스웨덴(1.8배)의 소비 증가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1970년 이후 최근까지의 높은 가구 지출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표 Ⅵ-6, 그림 Ⅵ-5). 도시 근로자가구의 명목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은 1970년에서 2024년 사이 각각 2.7만 원과 2.5만 원에서 542만 원과 383만 원으로 급등했다. 1970년에서 2024년 기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도시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실질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은 각각 8.3배와 6.3배 증가했다. 동일 기간 도시 4인 근로자가구의 실질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은 2인 이상 가구보다 높은 11.9배와 9.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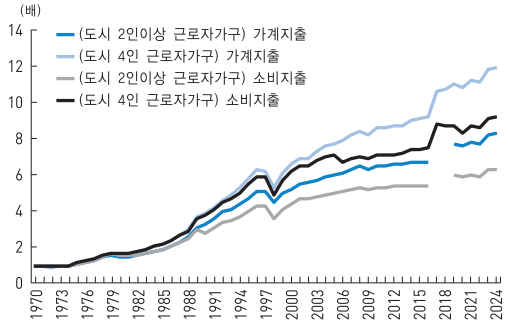
가구 지출 성장 배율은 특히 1980년대 중후반

〈표 Ⅵ-6〉 가구 지출, 1970-2024

연도	가구원수 (명)	명목지출 가계지출 (만 원)	명목지출 소비지출 (만 원)	실질지출 가계지출 (만 원)	실질지출 소비지출 (만 원)
도시 2인 이상 근로자가구					
1970	5.3	2.7	2.5	57	53
1980	4.5	18	17	88	83
1990	4.0	73	58	191	151
2000	3.6	190	149	301	236
2010	3.4	321	244	372	282
2020	3.1	437	314	437	314
2024	3.0	542	383	475	336
도시 4인 근로자가구					
1970	4.0	2.3	2.1	50	46
1980	4.0	17	16	81	77
1990	4.0	74	67	193	173
2000	4.0	208	179	329	283
2010	4.0	366	281	424	325
2020	4.0	533	381	533	381
2024	4.0	675	481	591	421

주: 1) 실질지출=(명목지출/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지수)×기준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2) 소비지출의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1970부터 1989년까지 10대 비목 분류체계, 1990년부터 2005년까지 COICOP 분류체계, 2006년부터 2024년까지 COICOP-K 분류체계의 자료를 사용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각 연도.

[그림 Ⅵ-5] 가구 실질지출의 성장 배율, 1970-2024 (1970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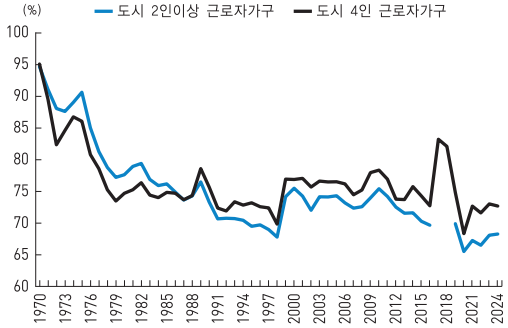


주: 1) 2017~2018년은 조사방식 변경 등으로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에 대한 지출액을 제공하지 않음.
2) 소비지출의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1970부터 1989년까지 10대 비목 분류체계, 1990년부터 2005년까지 COICOP 분류체계, 2006년부터 2024년까지 COICOP-K 분류체계의 자료를 사용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각 연도.

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가 가장 가파른 기울기를 보였다. 이는 당시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주화,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1989년) 등으로 인한 소비주의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가구소득 상승세 둔화, 빈곤율 상승, 비소비지출 급등 등으로 소비지출 증가세도 다소 둔화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가구 소득과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과 달리, 이 기간 평균 소비성향, 즉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그림 Ⅵ-6). 2인 이상 도시 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1970년에 94.4%에 이르렀으나 1997년에는 69.0%까지 떨어졌다. 이는 이 기간에 평균적인 가구의 실질 소득이 지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표 Ⅵ-3〉과 〈표 Ⅵ-6〉을 비교해 보면, 1970년에서 2000년

[그림 Ⅵ-6] 가구 평균 소비성향, 1970-2024



주: 1)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2) 2017~2018년은 조사 방식 변경 등으로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에 대한 지출액을 제공하지 않음.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사이에 소비지출은 4.4배 증가한 데 비해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5.6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평균 소비성향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후 70%대를 유지하다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60%대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의 영향으로 소비성향이 급증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다.

분배지표와 공적 이전소득

분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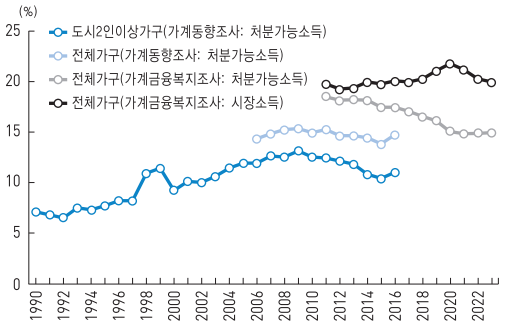
한국전쟁 전후의 원조경제에서 벗어나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더불어 절대 빈곤 상태에서도 벗어났다. '한강의 기적'과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상징되던 이러한 성장은 1997년 외환위기의 발발로 큰 위기를 맞았다. 이는 거시경제와 산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가구 경제 차원에서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빈곤과 불평등 수준이 크게 상승했다.

「가계동향조사」의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990년 7.1%, 1997년[10] 8.2%이던 빈곤율은

10) IMF에 자금지원 요청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날은 1997년 11월 21일로, 보통 이날을 IMF 외환위기의 시작점으로 본다. 따라서 그 경제적 충격이 가구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1998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국가기록원, 2025. 6. 11. 인출).

1998년 10.9%, 1999년 11.4%로 급등했다(그림 Ⅵ-7). 거시경제 측면에서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함에 따라 2000년 빈곤율은 9.2%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2010년 전까지 빈곤율은 추세적 상승세를 보여 2009년에는 13.1%를 기록했다. 2011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까지 시장소득 빈곤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데 반해,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에 조세와 공적 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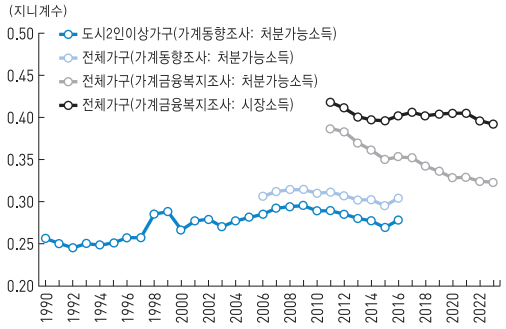
[그림 Ⅵ-7] 빈곤율, 1990-2023



주: 1) 빈곤율은 균등화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됨.
2) 빈곤율의 기초자료는 1990년부터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였으나 2017년부터 행정자료가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빈곤율과 유사한 추이를 보여준다(그림 Ⅵ-8). 즉, 외환위기 시기의 일시적 급등과 이후 2010년 전후까지의 추세적 상승, 2010년 이후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하락 흐름과 시장소득 지니계수와의 분기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가계동향조사」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는 1990년 0.256에서 1999년 0.288로 급등한 후 2000년에 0.266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에는 0.295로 외환위기 시기보다 더 높은 불평등 수준을 보였다. 2011년 이후에는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도 상승세가 꺾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졌다. 동일 기간에 시장소득 지니계수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약간 하락하였지만, 처분가능소득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이 기간에 공적 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Ⅵ-8] 불평등도(지니계수), 199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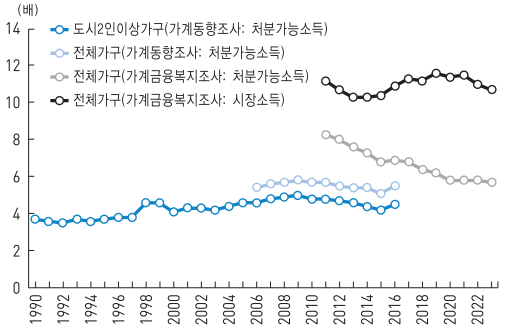


주: 1)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2)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산출
3) 소득 5분위 배율의 기초자료는 1990년부터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였으나 2017년부터 행정자료가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하위 20% 계층과 상위 20% 계층 간 평균소득 배율을 통해 양극화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5분위 배율도 빈곤, 불평등도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그림 Ⅵ-9). 「가계동향조사」의 도시 2인 이상 가구에서 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 대비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 배율은 1990년 3.7배, 1997년 3.8배에서 1998년에 4.6배로 급등하였다. 2000년에 4.1배로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 다시 점차 증가하여 2009년에는 외환위기 시기보다 더 높은 5.0배에 이르렀다.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 이후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간의 5분위 배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각각 11.2배와 8.3배로 둘 간의 격차가 2.9였으나, 2023년에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10.7,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로 두 배율 간 격차가 5.0에 달한다.

[그림 Ⅵ-9] 소득 5분위 배율, 1990-2023



주: 1)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 /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산출됨.
2) 소득 5분위 배율의 기초자료는 1990년부터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였으나 2017년부터 행정자료가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1990년대 이래 분배 상황을 종합하면, 외환위기 시기의 급격한 악화, 이후 2010년 전후까지 추세적 격차 확대, 2010년 이후 처분가능소득 분배지표 개선과 시장소득 분배지표와의 분기를 그 특징으로 한다.

복지지출과 공적 이전소득

외환위기는 국가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가구소득은 원천별로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 복지(복지지출)가 발전할수록 가구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 즉 현금성 복지급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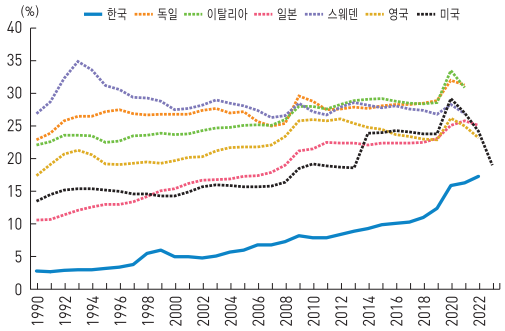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3%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1990년 기준으로 일본이 10.6%, 미국이 13.5%, 독일이 22.9%, 스웨덴이 26.9%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그림 Ⅵ-10).

이는 당시까지만 해도 비교 국가들에 비해 경제력이 현저히 낮았던 데서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구의 복지를 주로 가족과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최소한의 잔여적 개입만 하고자 하는 개발주의적 국가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여유진 외, 2017:60).

외환위기는 구조적 실업과 파산 등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파국적 영향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국가가 가구의 경제적 복지와 재분배에 개입할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 국민연금의 전 국민 확대, 2008년 기초연금 도입, 2008년 근로장려세제 도입, 2018년 아동수당 도입 등 많은 (현금성) 복지급여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0%, 2010년 7.9%에서 2020년 16.0%로 2000년 이후 급증했다. 2022년 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의 17.4%로 여전히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이들 국가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그림 Ⅵ-10).

[그림 Ⅵ-10]OECD 국가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1990-2022



주: 1) 사회복지지출은 공적 사회지출과 의무민간 사회지출의 합계액으로 산출됨.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2025.08.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도 빠른 속도로 상승해 왔다(표 Ⅵ-7). 전체 가구의 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2011년 180만 원에서 2023년 613만 원으로 증가했다.[11] 특히, 이 기간에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한부모, 노인, 장애인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이 급등했다. 2023년에 연간 평균 한부모가구가 795만 원, 노인가구가 1,153만 원, 장애인가구가 1,059만 원의 공적 이전소득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7〉 공적 이전소득, 2011-2023

(만 원)

연도	전체 가구	한부모 가구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2011	180	173	371	321
2012	187	211	412	347
2013	211	236	445	361
2014	240	283	516	432
2015	275	292	610	492
2016	360	437	696	613
2017	382	439	742	661
2018	423	502	798	728
2019	499	636	896	846
2020	657	876	1,029	1,010
2021	656	901	1,055	1,019
2022	625	798	1,101	1,033
2023	613	795	1,153	1,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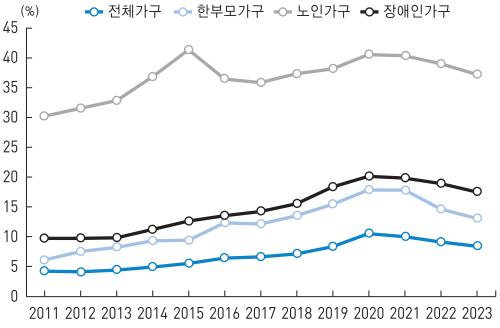
주: 1) 소득은 전년도 말 기준이고, 2017년 자료부터 공적이전 소득 중 고용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소급하여 행정자료를 반영함.
2) 한부모가구는 부모가 한 명이고 18세 미만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임.
3) 노인가구는 모든 가구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임.
4) 장애인가구는 등록장애인명부와 연계된 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된 가구원으로 있는 가구임.
출처: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그 결과, 가구 경상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대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그림 Ⅵ-11).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3%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8.5%로 증가했다. 특히 취약가구라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1)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657만 원과 656만 원으로 급등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결과이다. 2022년 이후 공적 이전소득은 다소 감소했다.

2023년 각각 37.3%, 17.6%, 13.1%에 이른다. 이처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적 이전소득의 절대액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그림 Ⅵ-7]과 [그림 Ⅵ-8]에서 보듯이 2010년 이후로 복지국가의 재분배 효과도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Ⅵ-11] 경상소득 중 공적 이전소득 비율, 201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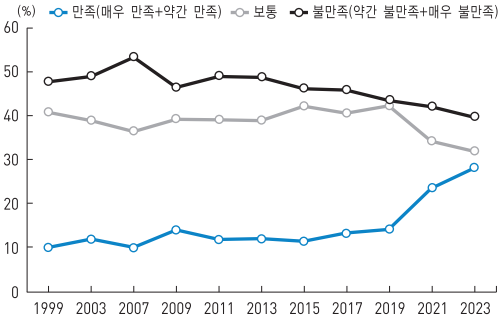
주: 1) 소득은 전년도 말 기준이고, 2017년 자료부터 공적이전 소득 중 고용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소급하여 행정자료를 반영함.
2) 한부모가구는 부모가 한 명이고 18세 미만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임.
3) 노인가구는 모든 가구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임.
4) 장애인가구는 등록장애인명부와 연계된 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된 가구원으로 있는 가구임.
출처: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소득 및 소비 만족도

소득과 소비는 가구의 경제적 복지를 가늠하는 객관적 지표인 동시에 주관적 삶의 질과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질 소득이나 지출 증가가 반드시 주관적 만족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1999년 10.0%에서 2019년 14.1%로 약간 높아지는 데 그쳤으나, 2021년 23.5%, 2023년 28.1%로 크게 개선되었다(그림 Ⅵ-12).[12] 이는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기보다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림 Ⅵ-12]소득 만족도, 199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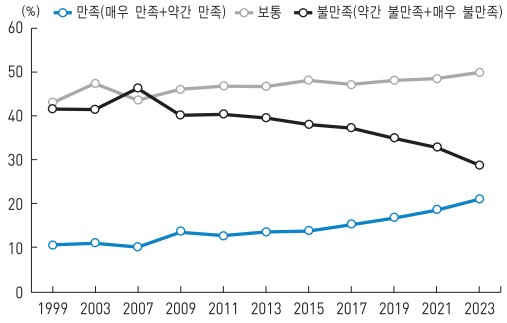
주: 1) 2009년까지 15세 이상, 2011년부터 19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1999년은 매우 만족, 만족한 편, 그저 그렇다, 불만족한 편, 매우 불만족, 모르겠다(1.1%)의 6개 항목으로 구성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2021년과 2023년에 다소 극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Ⅵ-13). 2009년 13.7%이던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2023년에 21.2%로 증가했다. 또한 소득과 달리 이 기간에 소비생활 만족도가 보통이라

12) 본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2021년에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대에서 고루 '약간 만족'의 비율이 2019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응답한 사람도 약간 증가하였으며, 만족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이에 비례하여 감소했다. 이로써 2023년 기준으로 소비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28.9%로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39.8%에 비해 약 10%p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Ⅵ-13]소비생활 만족도, 1999-2023



주: 1) 2009년까지 15세 이상, 2011년부터 19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1999년은 매우 만족, 만족한 편, 그저 그렇다. 불만족한 편, 매우 불만족, 모르겠다(4.8%)의 6개 항목으로 구성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나가며: 결론 및 함의

광복 이후 쉼 없이 달려온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성과가 '물질적 풍요'의 극적 증가라는 데 이견을 달기 어려울 것이다. 이 장에서 다룬 가구 소득과 지출의 변화상이 단적인 예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압축적인 성장을 이뤄내며 중진국의 문턱을 넘었다. 이 기간에 가구의 소득과 지출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소득과 지출이 명목뿐 아니라 실질 가치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는 시장은 물론이고 국가 역할의 측면에서도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기존에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던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공적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도 커지면서 상대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실질소득은 꾸준히 상승하여 구매력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하지만 앞으로 80년이 과거 80년과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빠른 성장과 물질적 풍요에 가려진 어두운 이면들, 예를 들면 분배 악화, 심각한 노인 빈곤, 개인화와 고립, 사회적 분열,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 등을 마주할 때 이제는 경제 성장과 개발을 넘어서 '성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 도래하였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가기록원. N.D.「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550억 달러의 빚을 진 경제국치의 날(남애리 집필)」.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imf.do에서 2025. 6. 11. 인출.
김지연, 김준형, 정규철. 2025.「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KDI 현안분석.
여유진, 김미곤, 김수정 외. 2017.「한국형복지모형 구축 Ⅳ: 복지환경의 변화와 대안적 복지제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데이터처. 2015.「위대한 숫자의 역사: 사회통계(편)」.
한국은행. 2005.「숫자로 보는 광복 60년」.